

독일의 고용기적 : 원인과 리스크

Andreas Nölke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머리말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비교를 위해 실시하는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s)’ 결과, 독일의 실업률은 2014년 4월 기준 5.2%로 EU 회원국 평균 실업률인 10.4%보다 뚜렷하게 낮았고, 이는 오스트리아(4.9%)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독일의 연방통계청이 밝혔다. 1991년 3,880만 명이었던 독일의 고용인구는 2013년 4,160만 명에 이르렀고(BPB, 2013: 115)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고용인구는 2005년 이래 계속 증가하였는데, 2008~2009년 금융위기와 이어져 발발한 유로권 재정위기 때에도 증가하였다. 독일 고용인구의 증가가 더 놀라운 이유는 독일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 불렸고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이를 표현하는 ‘고용기적’은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취업자 중 다수는 사실 불완전고용 상태로,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어한다. 그 밖에도 많은 일자리의 임금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독일 고용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독일 ‘고용기적’의 덜 알려진, 긍정적 측면들을 소개한 후 고용인구 증가를 가능케 한 몇몇 원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으로 나

누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고용인구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조치의 덕을 보았다. 중기적으로는 통일 때문에 매우 악화되었던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유로존 결성을 통한 화폐 단일화로 회복되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 고용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 모델’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부문이 여전히 건재할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후발 산업국들로 인해 높아진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었다는 점이 독일 고용인구의 증가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고용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미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개혁의 필요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 고용기적의 어두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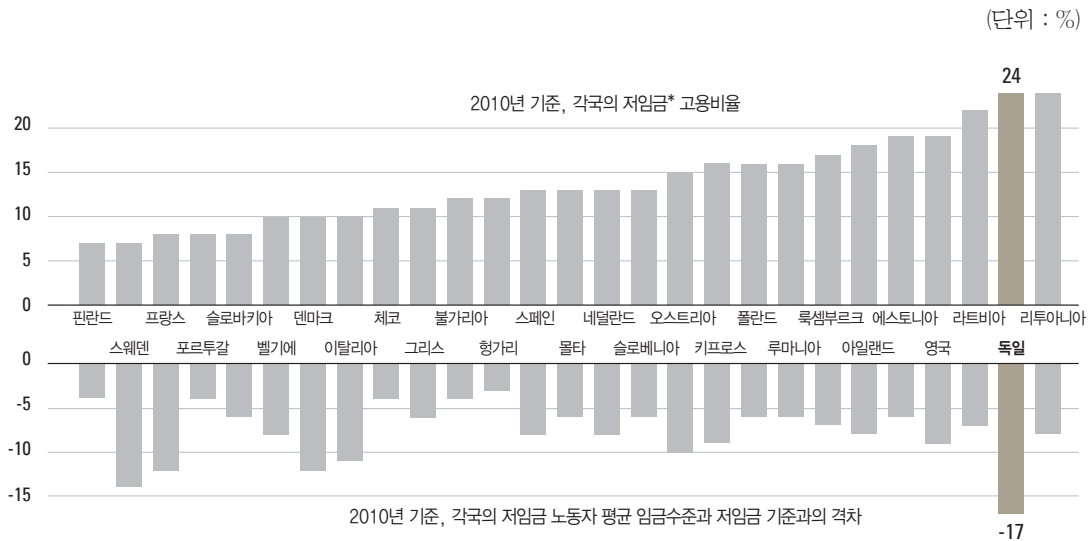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근 독일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이면에 어두운 단면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총근로시간은 1991년 600억 8천만 시간에서 2012년 579억 7천만 시간으로 감소하였다(BPB, 2013: 116).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역시 1991년 1,552시간에서 2012년 1,39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감소가 항상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임금보상(Lohnausgleich,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시간당임금을 인상해 기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역자주)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01~2002년 11.7%였던 빈곤인구의 비율도 2009~2011년에 13.2%로 늘어났다. 공식 등록된 실업자 수도 증가했는데, 1991년 260만 명이었던 실업자 수는 2012년 290만 명으로 늘어났다(BPB, 2013: 125). 이처럼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적절한 일자리가 없는 독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20년 동안 독일 노동시장에서 발견된 가장 큰 특징은 이중구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 외에 파트타임직, 기간제 일자리, 미니잡(월소득 450유로 이하), 과전근로직 등과 같은 비전형 고용이 늘어났다. 특히 여성과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비전형 고용에 종사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비전형 노동자의 수가 790만 명이었고

‘전통적’ 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2,420만 명이었다. 1993년 전체 노동자 중 13%를 차지했었던 비전형 고용의 비율은 2012년 약 22%를 기록했다(BPB, 2013: 120).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 되는 등 비전형 고용의 증가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비전형 고용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커졌다. 특히 독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예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파트타임 노동자와 미니 잡 종사자는 소득만으로 빈곤층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빈곤층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아젠다 2010개혁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초부터였다(BPB, 2013). 취업 의지가 강한 구직자라도 비전형 일자리를 통해 항상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구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숙련 구직자는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공인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고용인구 중 37%가 비전형 일자리에 종사함. BPB,

[그림 1] 유럽연합의 저임금 고용 비율과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



주 : * 저임금 기준은 평균임금의 60%.
 자료 : Böckler Impuls 18/2013.

2013: 120).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과 루르지방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독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미숙련자까지도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였다(FAZ, 2014). 노동시장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나은 상태였다. 그래서 독일이 다른 EU 회원국보다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것이다.

■ 독일의 고용기적을 가능케 한 단기적 요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조정정책

독일의 현재 고용상태가 우수하다는 사실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대표적인 선진 산업국들보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로 인해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더 놀랍다(Bosch, 2011: 244).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푹 떨어진 것은 수출 강국인 독일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수출과 경제성장률은 크게 줄어든 반면, 파견 근로 부문을 제외한 독일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중에도, 그리고 직후에도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다(Bosch, 2011). 경제성장률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상대적으로 해고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위기 중 실시된 노동 재분배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근로자들은 위기 이전에 근로시간계좌제를 이용해 상당한 규모의 근로시간을 축적해놓은 상태였고, 경기가 악화되자 사용자와 노동자대표의 긴밀한 협조하에 해고 대신 근로시간계좌제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Bosch, 2011; Herzog-Stein et al., 2013a). 사용자와 노동자대표는 그 밖에도 이원적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실습을 받은 실습생들을 기업이 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청년실업률의 증가도 막았다. 그 밖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단시간노동에 대한 국가지원(고용지원센터에서 소득손실에 대해 부분 보상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시행하였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된 폐차보상금(Abwrackprämie,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2,000유로 지원) 같은 대책들은 오히려 기여도가 더 낮았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독일의 기업들은 금융위기 중 기존 노동력을 다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대량해고를 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의 노동법 때문에 어차피 대량해고는 쉽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바로 과견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전형 노동자였다.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자 독일 기업들은 핵심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없었고 곧바로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Bosch, 2011; Herzog-Stein et al., 2013a). 이는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특수한 정치적 지원정책보다도, 기본적으로 독일의 성장모델이 탄탄하며 독일 경제의 성장은 위기 때 단기적으로만 주춤하다가 금방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독일 기업의 확신 덕분에 가능했다. 이는 독일의 ‘고용기적’을 가능케 한 중장기적 요인과의 연결된다.

■ 독일 고용기적을 가능케 한 중기적 요인: 통일 여파로 인한 경기후퇴 이후 임금인상 자제 및 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준 유로존

독일이 현재 자랑하는 ‘고용기적’은 특히 독일이 1990년대 하반기, 그리고 2000년대 상반기에 ‘유럽의 병자’라 불릴 만큼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 당시 실업률은 이웃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경제는 역동성을 상실했었다. 일차적인 원인은 독일 통일이었다(Schweiger, 2014: 114~115). 동독이 서독에 통합되면서 늘어난 수요로 서독의 산업은 1990년대 초 아주 짧은 기간 호황을 누렸지만, 동독의 산업은 통일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붕괴되었다. (동독과 서독의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1:4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도) 동독의 화폐를 서독 화폐와 1:1로 교환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동독은 순식간에 산업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동시에 동독의 전통적인 수출대상지였던 동유럽까지 몰락하면서 동독 산업은 붕괴되었다. 여기에 독일 정부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금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동독 경제의 붕괴로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비용이 높아졌고 서독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Dustmann et al., 2014). 그 결과 중 하나로 1990년대 중반부터 (즉 아젠다 2010 개혁보다 훨씬 앞서) 비전

형 고용이 증가하였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전통적(정규직) 고용에 비해 비전형 고용이 임금 외 노동비용이 더 낮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유로화가 유럽의 공동화폐로 도입되자(그리고 당시 주식시장에서 IT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가 악화되자) 독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었다. 신설된 유럽중앙은행은 독일 산업 입장에서 지나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했고 때문에 경기침체는 계속되었다.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무엇보다 독일 연방은행을 모델로 설계된 유럽중앙은행이 이러한 통화정책을 통해 독일 연방은행처럼 신중한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다수의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호황기를 제한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공동화폐가 도입되고 공동 통화정책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별 이자율 책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선택한 통화정책은 유럽 남부 국가들에게는 느슨한 반면, 2000년대 초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긴축적인 정책이었다(Brenke und Wagner, 2013; Höpner, 2013).

그러나 중기적으로 유로화의 도입은 독일 수출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화폐가치 하락 위험이 없어지면서 유럽 주변부 국가들로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했고(대출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경기가 살아나 소비와 투자지출이 증가했다. 독일 산업도 그로부터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럽 남부 국가의 임금은 크게 상승하였지만, 독일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유로존 국가들 간 임금 격차가 커졌고 경쟁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 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은 특히 유로존 내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유로존의 다른 회원국들은 독일처럼 일정 기간 임금 인상 자제를 가능케 하는 노사관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었다(Höpner, 2013). 여기에 독일 마르크가 계속 존재한 경우보다 유로화의 도입이 독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유로화는 전통적인 통화약세 국가의 합류로 독일 마르크에 비해 다소 약세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독일은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 있었다. 반면 유로존 국가 중 유럽 남부 국가들은 유로화가 기존의 자국 화폐에 비해 지나치게 강세였다.

독일 경제의 수출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합적으로 작

용한 두 가지 요인이 발견되는데, 바로 환율효과와 노동비용의 유리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비용이 유리하게 변한 것은 아젠다 2010 개혁 덕분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임금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만 인상되고 심지어 실질임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덕분이다(Dustmann et al., 2014). 이미 1990년대 중반 수출강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폭이 실질임금 상승폭보다 커졌다.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가 가능했던 것에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일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통일과 EU의 동유럽 확대에 의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줄어들고 노조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수출)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이러한 전략이 가져다준 성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반면,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은 감소했다. 여기에 생산지가 일부 동유럽으로 이전되고 (특히 비전형 고용의 증가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즉 생산과정에서 투입비용이 인하되면서 가격경쟁력도 높아졌다(Dustmann et al., 2014). 독일의 수출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적은 수준의 임금인상 및 이웃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 상실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다. 반면 아젠다 2010 개혁은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상황 개선 시점과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젠다 2010이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적어도 앞서 소개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서 말이다(Akyol et al., 2013; Brenke und Wagner, 2013: 115; Dustmann et al., 2014: 184).

■ 독일 고용기적을 가능케 한 장기적 요인: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변화

독일 수출산업의 중기적 가격경쟁력 개선은 장기적인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 변화라는 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중국을 비롯한 후발 산업국들의 부상 덕분에 독일 수출품의 수요는 예전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 이외의 전통적인 유럽 수출 국가들은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이 (금융) 글로벌

화라는 맥락에서 점점 악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회복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생산 중심지가 전통적인 3대 산업국(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점차 중국, 인도, 브라질로 대표되는 후발 산업국으로 바뀌었다(May et al., 2014). 이러한 변화로 기존 의 산업국에서는 강한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대신 금융부문이 혜택을 봄)뿐 아니라 유럽 남부 국가들도 타격을 입었다. 반면 독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2년 기준 총부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페인 7.2%, 영국 9.8%, 프랑스 10.4%, 이탈리아 12.5%였던 반면, 독일은 3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Heymann und Vetter, 2013: 3). 독일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독일의 수출이 후발 산업국가들의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특히 유형자산(예를 들어 기계제작)에 대한 수요와 급성장한 중산층이 찾는 소비재(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다른 EU 회원국들, 특히 유럽 남부 국가들은 후발 산업국들의 부상으로부터 특별히 이익을 취하지 못하거나 후발 산업국가의 저가 노동력 때문에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Heymann und Vetter, 2013: 7).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독일이 유리한 임금 추이 덕분에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독일 수출 산업의 주요 고객인 후발 산업국들은 독일 제품의 품질과 독일이 틈새시장에서 자랑하는 높은 경쟁력 때문에 독일을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유럽 이웃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후발 산업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독일의 유리한 임금 조건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후발 산업국가들과 독일 간에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이 분업은 여전히 제 기능을 다 하는 독일 라인강-자본주의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Schweiger, 2014: 128~131). 독일 경제는 한때 ‘독일 주식회사(Deutschland AG)’라고 불릴 만큼 대기업, 은행, 보험 업계 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구조를 상실했고, 30대 DAX 상장기업도 이제는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선시 되는 것들을 방향설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임금결정제도가 기업에 더 유리하게 분권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정시장경제의 다양한 제도적 상보성은 여전히 독일 수출산업의 핵심부문,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부문에서 여전히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영권 구조와 재정지원 구조, 장기적 고용관계, 노동자 교육을 위한 대규모 투자 덕분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합의 중심적이고 유연한

노사관계가 새로운 경쟁상황에 대한 적응을 큰 정치적 갈등 없이 가능케 하였다(Dustmann et al., 2014). 그러나 비교자본주의 연구들은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제도가 갖는 상보성이 특별한 역사적 조건하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독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부가가치 중 기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의 산업구조는 서유럽 이웃국가들의 산업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며 결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구조이다(Heymann und Vetter, 2013: 8).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유럽의 이웃국가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이 택한 방식을 따르라고 반복해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다.

■ 독일 고용기적 이면에 숨겨진 위험 -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금융위기 중 근로시간의 유연화, 노동비용의 소폭 인상, 유리한 통화, 많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덕분에 지난 몇 년 사이 독일의 경제는 비교적 유리한 고용상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독일의 상황이 불안정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완전고용이 달성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독일은 GDP 대비 총수출액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네 배가량 높은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Brenke und Wagner, 2013: 115).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크게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줄어든 총근로시간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출붕괴의 여파를 더 이상 근로시간계좌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상쇄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독일 경제는 수년째 유로존 회원으로 단일통화의 혜택을 지나치게 크게 누리고 있다. 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외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상실해 고통스럽고, 사회적 부작용을 수반하며,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한 내적 평가절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정치적 긴장을 야기하고 유럽 통합이라는 목표 달성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가격경쟁력 회복을 통한 이윤이 매우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의 저축률

이 높아지면서 계속해 수요가 줄어들 위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독일의 ‘고용기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독일 노동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상당히 높은 빈곤위험을 고려하면, ‘독일의 경제모델이 과연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독일 경제가 내수시장에 보다 집중하여 종종 다른 나라와 갈등을 야기하는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것은 고용상황 개선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와 달리 독일처럼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수출을 위한 임금 인상 자제보다는 그로 인한 내수시장의 소비약화가 고용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om et al., 2010; Brenke und Wagner, 2013). 내수시장 강화로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재분배, 그리고 특히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 많은 경우 뒷전이었던 공공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03년 이래 독일에서 순공공투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Herzog-Stein et al., 2013b). 이 조치들은 독일 국내수요를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 동력으로서 수출산업이 안고 있던 부담을 털게 해줄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독일을 향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 ‘고용기적’을 일구어 냈다고 비난하는 유럽의 이웃국가와의 긴장관계도 완화시켜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Akyol, Metin, Michael Neugart and Stefan Pichler(2013): Were the Hartz Reforms Responsible for the Improved Performance of the German Labour Market? In: Economic Affairs Vol. 33, No. 1, S. 34~47.
- Bosch, Gerhard(2011): The German Labour Mark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Miracle or Just a Good Policy Mix? In: Daniel Vaughan-Whitehead (Hrsg.), Work Inequalities in the Crisis: Evidence from Europe, Edward Elgar: Cheltenham, S. 243~277.
- BPB(2013): Datenreport 2013: Ein Sozialbericht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 Brenke, Karl und Gert G. Wagner(2013): Ungleiche Verteilung der Einkommen bremst das Wirtschaftswachstum, in: Wirtschaftsdienst vol. 93, No. 2, S. 110~116.
- Dustmann, Christian, Bernd Fitzenberger, Uta Schönberg und Alexandra Spitz-Oener(2014): From Sick Man of Europe to Economic Superstar: Germany's Resurgent Economy, in: Journal of European Perspectives Vol. 28, No. 1, S. 167~188.
- FAZ(2014): Jeder zweite Arbeitslose taugt nur für einfache Arbeit: Der bedarf der Wirtschaft geht jedoch zurück,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r. 138 vom 17. Juni, Seite 18.
- Heymann, Eric und Stefan Vetter(2013): Re-Industrialisierung Europas: Anspruch und Wirklichkeit, DB Research EU Monitor, Deutsche Bank: Frankfurt.
- Herzog-Stein, Alexander, Fabian Lindner und Simon Sturm(2013a): Explaining the German employment Miracle in the Great Recession – The Crucial Role of Temporary Working Time Reduction, IMK Working Paper 114,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Düsseldorf.
- Herzog-Stein, Alexander, Fabian Lindner und Rudolf Zwiener(2013b): Nur das Angebot zählt? Wie die einseitige deutsche Wirtschaftspolitik Chancen vergeben hat und Europa schadet, IMK Report 87,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Düsseldorf.
- Hom, Gustav, Heike Joebgies und Till van Treeck(2010): Einseitige Exportorientierung behindert Wachstum, IMK Policy Brief 1, 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Düsseldorf.
- Höpner, Martin(2013): Die Verschiedenheit der europäischen Lohnregime und ihr Beitrag zur Eurokrise: Warum der Euro nicht zum heterogenen Unterbau der Eurozone passt, MPIfG Discussion Paper 13/5, Max-Planck-Institut für Gesellschaftsforschung: Köln.
- May, Christian, Nölke, Andreas und ten Brink, Tobias(2014): Institutionelle Determinanten des Aufstiegs großer Schwellenländer: Eine global-politökonomische Erweiterung der „Varieties of Capitalism“, in: Elena Heßelmann/Cord Jakobeit/Franziska Müller/Ingrid Wehr/Aram Ziai(Hg.), Entwicklungstheorie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Vol. 54

(Sonderheft).

- Schweiger, Christian(2014): The EU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ew Varieties of Capitalism, Edward Elgar: Cheltenham.
- Statistisches Bundesamt(2014): Unemployment rates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pril 2014,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NationalEconomyEnvironment/LabourMarket/Unemployment/Unemployment.html>, accessed 21 June 2014.